



두 번의 3.11, 두 번의 긴급사태선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이 또다시 강진의 피해를 입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여진의 불안감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이번 지진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라고 했고,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 앞으로 10년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작년 1월 고베 나가타지역에 있었다. 고베 나가타지역은 구두산업을 기반으로 한 재일한인의 집주지이며 1995년 한신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이다. 1월 17일이 가까워질수록 고베는 지진이야기로 가득했다. 고베의 숙소에서 보는 TV방송에서는 한신대지진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지진으로 인한 큰 상실을 딛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진으로 모친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나 당시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지진이 발생했던 새벽 5시 47분에 열리는 시청 앞 추도식을 위해 JR이 조기 운행되었다. 새벽 추도식에 나온 어떤 이는 1월 17일 추도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1년을 시작한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작년 1월 16일은 일본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이었다. COVID-19라는 이름도 아직 세상에 없던 때이다. 그러나 곧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월 11일 COVID-19을 명명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후쿠시마 J-빌리지에서 출발하는 ‘부흥의 불’ 성화봉송 출발을 단 이틀 앞두고 3월 24일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의 도쿄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던 일본사회에 코로나19는 갑자기 솟구친 거대 암초였다. 올림픽 선수와 관계자, 관객이 세계적으로 대이동하여 경기장을 메우는 올림픽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밀집을 피해야 하는 코로나19 대응과는 가장 모순되는 이벤트였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을 되짚어보면 2020년 4월 7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선언을 했다. 긴급사태선언을 앞두고 지금이 ‘결정적인 갈림길’이며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전문가 발언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4월 7일의 코로나19 신규감염자수는 368명이었다. 첫 감염자 발생으로부터 긴급사태선언까지의 일본의 누적확진자 수는 약 4,500명이었다. 되돌아보면 이 누적확진자 수는 지난 연말연시의 하루 확진자수 보다 적지만, 당시 긴급사태선언과 함께 일본의 변화가는 텅 비어버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으나 치명률은 낮다는 점에 입각해 클러스터(집단감염) 대책에 집중했다. 밀폐, 밀집, 밀접의 세 가지 밀(3つの密)을 피하는 ‘자숙’을 요청하는 가운데,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며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1차 긴급사태선언으로 ‘전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후 ‘경제와 방역’의 양립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일관되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취임 전인 9월 12일 총리선거를 앞둔 인터넷 토론에서 “고 투 트레블 1개월 반 동안 780만 명 이용자 중 7명만이 감염이 되었다. 확실히 지킬 것을 지키면 이렇게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발언을 했다. 부정확하지만 가장 ‘긍정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불안감에 두꺼비를 덮고 아슬아슬한 ‘위드 코로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중심을 외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여론과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고 투 트레블 캠페인’에 대한 지난 12월 NHK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으며, ‘일단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9%였다.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서야 스가 총리는 마지못해 ‘고 투 트레블’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감염자 급증세 속에서 2주 뒤인 12월 28일부터 중단한다는 결정이었기에 다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하루 확진자가 4,500명을 넘은 12월 31일에도 긴급사태선언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긴급사태선언에 이어 도쿄도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 등 1도 3현의 자치단체장들이 긴급사태선언 검토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2021년 1월 7일 도쿄 및 수도권에 긴급사태선언이 재발령된다.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의 주요한 내용은 음식점과 주점의 야간영업 제한이다. 일본의 방역 전문가들은 음식점과 주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염확대의 주요한 고리로 보았고, 정부 대책은 음식점과 주점 방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은 ‘요청’으로, 응하면 협력금을 지원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일본의 초중고는 작년 3월 초의 임시휴교조치와 4월의 긴급사태선언 당시를 제외하고는 휴교하지 않았다.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학생들의 등교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신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핍박(逼迫)에 대한 우려가 코로나 초기부터 강하게 존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 병상수 이용률은 일본 코로나 감염대책의 주요 지표이며, 지역별 병상수 이용률, 즉 확보한 코로나 병상과 이용되고 있는 병상수가 매일 보도되었다. 의사협회는 ‘병상이용률이 100%가 아니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료현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 이상 핍박되면 평상진료나 응급의료를 압박해 생명의 선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앞뒤가 바뀐 말 같지만 “의료핍박을 막으려면 코로나 감염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료계의 호소가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의 배경에 있었다.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 역시 여론과는 괴리가 있다. 1월 9~10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35.3%는 ‘중지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꾸준히 우세했으며,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최근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입국규제완화, 경기장 관중실험 등 올림픽을 의식하여 방역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점점 식어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림픽 개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모리 요시로 조직위 회장이 사퇴하고 도쿄올림픽이 더욱 혼탁해진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3월 25일 성화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후쿠시마 J빌리지 건물에도 균열이 생겼다. J빌리지는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후쿠시마 원전 유치의 산물이며, 또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 일본의 감염자수나 사망자의 수로 보아 일본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1파, 2파, 그리고 가장 호되게 3파를 겪으면서 코로나 방역은 간단히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 또한 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 사임의 배경에는 ‘아베노마스크’로 상징되는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마스크 업체 선정부터 품질 문제까지 각종 의혹 속에서 ‘공공’의 신뢰를 잃은 아베노마스크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에는 ‘재후災後’라는 성찰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부흥의 올림픽을 외치는 일본 정치에 ‘재후災後’가 있었다.

다시 작년 1월의 고베 나가타로 돌아가보면, 신나가타역 남쪽지구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한신대지진 이후 25년의 고베지역 재개발은 공식적으로 최종완료가 되었다. 한신대지진 최대 피해지였던 고베 나가타 지역은 도시정비와 재개발로 이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경관이 바뀌었다. 그러나 나가타지역 상점가 공실문제가 보여주듯 이전의 변화함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속에 고령화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일본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괴멸적인 지진 피해와 힘겨운 복구의 경험이 ‘풍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억과 추모’의 맥락이 1월 17일을 중심으로 재생되고, 이는 고베 시민사회의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월 17일 즈음 고베에는 후쿠시마, 구마모토 등 재해지역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연대하며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였다.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같은 장소를

9년간 꾸준히 사진을 찍어 지역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 학생들의 사진전도 기억에 남는다. ‘자숙’을 두고 일본의 국민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숙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초래한 ‘자숙경찰’이나 ‘상호감시’의 폐색감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의 고베의 분위기를 떠올리면 일본사회가 코로나19 속에서 버티는 ‘자숙’의 힘은 이 재난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박승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